

<要 約>

- 韓美間 「4者會談」 제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韓半島 永久 平和 問題의 當事者間 合意와 아무 조건없는 조속한 「4者會談」 수행임.
- 北韓과 美國間의 接近이 있기 때문에, 어떤 變形된 形態라도 南北 對話의 물꼬를 확고히 트도록 해야 함.
- 그러나 북측은 「4者會談」에 바로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금년 11월에 미국 선거가 있는데, 지금 우세한 상황에 있는 클린턴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분란 발생으로 인한 支持率 減少임. 북한은 이것을 잘 알고 이용하려 할 것임
- 우리는 「4者會談」을 너무 조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봄. 美國 人統領 選舉가 끝나고 북측 태도를 본 후,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지 그 전에 어떤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끌려가는 형태가 되어버릴 것임.
- 南北 關係의 진전없이 북한과 미국이 접근할 경우, 남한은 고립되고 아무런 主動的 發言權을 행사하지 못할 것임.
 - 이 경우 「4者會談」이 성사되어도 주변 4강의 新秩序 構築 過程에서 남한의 발언권이 약화되어 통일이 안되고 항구적인 分斷 體制로 남을 가능성이 큼.
- 한반도 문제는 國際 問題化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봄.
 - 즉, 「4者會談」같은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회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됨. 다만, 우리의 國益이 손상되지 않도록 國際化시키는 것이 중요함.
- 統一 氛圍氣 造成을 위한 방안은 政經分離原則밖에 없다고 봄. 즉, 경제적으로 북측과 협력함으로써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음.
- 北韓이 南韓과 접촉하지 않는 이유는 남한과의 접촉에서 얻는 것보다 日本과의 접촉에서 얻는 것이 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그러나 북측은 北日間 國交 正常化는 미국과의 國交 樹立 전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南北 關係의 改善은 「南北基本合意書」를 토대로 연속성을 살려 다루어져야 하며, 이번 「4者會談」의 조건도 공정하게 마련해서 우리 국민도 공감하고 북한도 수용하도록 해야 함.

1. 4者會談의 背景과 意味

4자회담 제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영구 평화 문제의 당사자간 합의와 아무 전제 조건없이 조속한 4자회담의 수행입니다. 우리의 경우 4자회담은 남북간 합의가 선행되고 주변 국가들이 보장하는 형태(2+4)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회: 탈냉전 이후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북한은 경제난 해소와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과 직접 평화 체제 교섭 협상을 주장하면서 한국 배제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통일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남한의 「당사자 해결 원칙」과 북한의 「대미 직접 교섭 원칙」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4자회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토론에서는 먼저 4자회담의 배경과 의미, 미·일·중·러 등 주변 4국의 입장을 짚어 본 후, 남북한의 입장, 4자회담의 성취를 위한 우리의 대응 정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정재문: 4자회담의 내용이 2+4가 되어야 하느냐 4+2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독일 통일의 상황은 4+2였습니다. 우리 경우는 남북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되는 주변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는 2+4가 되어야 합니다.

조순승: 첫째, 4자회담을 발의한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는 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만일 미국이 주도했다면, 한국은 미국에 따라가는 형식이 되어 한국 외교에 있어서 크나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주도했다면 한국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 4자회담 제의의 많은 부분이 우리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 내용적으로 많은 작업을 해놓았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공로명 외무장관이 러시아에 가서 수상도 못 만나고 왔는데, 이것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특 터트려 놓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4자회담 제안의 내용을 보면 3 가지밖에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제4항의 영구 평화의 문제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할 것, 제6항과 7항의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조속히 4자 회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회담 제의가 어디 있습니까? 남북한의 영구 평화 구축 문제에 대해 당사자 해결 원칙을 제시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4자회담은 예비회담에 지나

4자회담의 실현은 북한의 앞에서 언급한 전제 조건의 충족 여부 즉, 수용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4자회담은 과거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해온 각종 대북 제의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4자회담 제의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4자회담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4자회담이 되어야 외교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적어도 우리 당 내에서는 4자 회담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렇게 볼 때 4자회담이 심사숙고 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4자회담의 성사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하여 지혜를 모아 이회담을 잘 다루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 외교 수단의 불모가 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4자회담 제의는 미국으로서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금년 11월에 있을 선거까지는 북측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동복: 4자회담의 성격과 관련해서, 4월 16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을 보면 “이 회담은 항구적 평화 협정을 이룩하는 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자회담에서 광범위한 긴장 완화 조치도 토의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막연합니다.

그리고 회담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공동발표문에 나와 있는데, 제2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확고한 대한 안보 공약을 다짐했고, 한미 안보 동맹 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전제 위에서 4자회담은 논의되는 것입니다. 또 “양국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 협정에 의해서 대체될 때까지 현 停戰協定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4자회담의 기본 전제입니다.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일은 韓國民이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 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위에서 “4자회담을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조속히 개최할 것에 합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후가 모순되는 것으로서, 4자회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4자회담의 실현을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제안요소인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 문제가 나옵니다. 앞에서 나열된 기본 전제 조건을 북한이 충족시킬 수 있으면 4자회담은 성립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4자회담은 원론적으로 성립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자회담의 성격은 과거 정부가 여러 차례

4자회담의 발상이나 6자회담, 2+2, 2+4 등은 80년대 말 독일에서 전개되었던 상황을 우리가 의제화해서 본따려고 하는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상황적 요소가 한반도 주변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기해온 각종 대북 제의와 퀘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4자회담 제의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4자회담 제의가 갖는 의미는 相對化인데(미국은 상대화된 개념으로 4자회담에 접근하고 있음), 지금 4자회담 제의 이후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4자회담을 절대화시켜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이것이 성사 안되었을 경우에 오는 부정적인(negative) 피드백(feedback)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4자회담을 絶對化하는 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한미간에 앞으로의 전략·전술을 조율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4자회담은 국제회담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의 함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4자회담이 주변 환경이 성숙되어 강요된 것이냐 아니면, 주변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것이냐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4자회담의 발상이나, 6자회담, 2+2, 2+4 등은 80년대 말 독일에서 전개되었던 상황을 우리가 지꾸 의제화해서 본따려고 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주변과 한반도 주변의 국제 환경은 유사성이나 연관성, 그리고 공통성도 전혀 없습니다.

즉, 독일과 같은 상황적인 요소가 한반도 주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사전적으로 여건이 성숙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지금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4자회담은 1995년 8월 15일에 내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만, 사전에 내밀어 보니까 북한이 매우 완강히 거부했고 중국이 아주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4자회담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내놓았다고 봅니다. 북한도 4자회담 때문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4자회담 제의를 이용해서 북한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전술적 입장 정립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인데, 중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이면 찬성 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찬성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찬성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북한은 틀림없이 평화 협정 관계는 미국과 하고, 남북 간에는 이미 이루어진 「기본합의서」를 가지고 협상하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고, 4자회담의 형식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도한 4자회담과 다른 회담이 되

지금까지의 남북 대화의 발전 과정을 보면, 대화가 한번 단절되면 2,3년이 지나가 버려, 그 동안의 남북 대화는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그러나 북미간의 접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형된 형태라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확고히 트도록 해야 합니다.

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4자회담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이 찬성하면 우리도 찬성하겠다고 그러고, 또 러시아는 지금 능력으로 보아서 끼어들 처지는 아니니까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일본은 냉철하게 볼 때 4자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괜히 거기에 덩벼들어서 車치고 包치고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실익면에서는 일본은 이미 KEDO에다 관여하고 있고, 한반도 국제 협의 환경의 주주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찬성한다”는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상황을 볼 때, 4자회담의 앞날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자회담을 절대화시켜서 거론한다면,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수인: 개혁시대에 김영삼 정권이 담당해야 할 역사적 과제는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인데, 오히려 56共의 극우 강경 정권보다도 훨씬 더 대북 강경정책을 썼기 때문에 남북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남북 주도로 이루어지고 주변 강대국이 부차적으로 보장·승인하고 협력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북한·미국은 성공을 거두고 남북 관계는 더욱더 실패에 빠져버렸습니다.

분단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강대국과 우리의 이익 조건이 배치되었을 때, 힘이 없는 우리 민족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100 년전의 식민지시대, 50 년전의 남북 분단이 다 그런 것인데, 언제든 세계사의 대전환이 오는 시기에 그 물결이 동북아시아에 닥치면 한반도 희생의 법칙이 관철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남북이 주도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또다시 강대국이 주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자못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남북 대화의 발전 과정을 보면, 대화가 한 번 단절되면 2,3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남북 대화는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그러나 북미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형된 형태라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확고히 트도록 해야 합니다.

2. 周邊 4國의 立場·戰略과 南北韓의 立場·關係

사회: 4자회담 제의 이후 미국과 일본이 미일 新안보조약을 선언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미일안보조약을 보면, 최근 새로이 크게 세력화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

국제 사회에서의 4자회담에 대한 반응은 국제적인 조류에 따라 성사되어야 한다는 기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측 문제보다는 북측의 문제가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측에서 수정 제의를 하든 어떤 형태의 회담에 응하든 4자회담은 한번은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한편, 새로 군사력을 확대하는 일본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면이 있습니다. 즉, 동북아시아에 있어, 미일, 중러 이 두 축 4강에 의한 패권 경쟁 구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 구도는 과거 냉전시대에 있었던 이념적·체제적 차이로 인한 4자 대립 구도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자국에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새로운 4자 대립 구도라는 점에서, 냉전 시대의 대립 구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북아에 있어서 신질서 형성의 성격 변화에 따라, 4강의 對한반도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 관계도 달리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4자회담과 관련하여 주변 4국의 입장과 전략, 남북한의 입장과 남북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동북: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 한미간, 북미간에 얘기되어야 될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겹치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간에 논의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야 하고, 북미간에 논의해야 할 문제는 조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남북한이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이 절대로 남북 간에는 안한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안내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일정한 변화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다려 주는 인내와 아량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무슨 제안을 내어서 북한을 못살게 굴고, 민간은 민간대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딩(prodding: 자극하는 행위)은 북한의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재문: 4자회담의 주목적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또 우리가 바라는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자회담 관련 보도를 IPU 회의장에서 보았는데, 국제 사회에서의 반응을 보면 4자회담은 국제적인 조류에 따라서 성사되어야 한다는 기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북측이 거부했을 때, 우리측 문제보다는 북측의 문제가 앞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대국의 입장이 종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무관심을 표명한다든지 일본이 자세한 말은 안하고 미일간의 새로운 방위체

북측이 4자회담에 바로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은 클린턴 대통령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분란 발생으로 인한 클린턴 지지율 감소입니다. 북한은 이것을 잘 알고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제 운운 하는 것은, 중국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보에 관련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측에서 수정 제의를 하든 어떤 형태의 회담에 응하든 4자회담은 일단 한번은 개최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거기서 북미회담을 하든 우리끼리 회담을 하든, 한번 해보는 데 대해서 우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국제 사회의 분위기나 북측의 실정을 볼 때, 북측이 4자회담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보기때문에 4자회담은 성사될 것으로 믿습니다.

3. 4者會談에 대한 北韓의 豫想 反應

사회 :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예상 반응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문 :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에 주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측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무슨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일단 4자회담은 한번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순승 :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외교의 정수입니다. 북한이 말을 전혀 안듣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말 안듣는 북측으로 하여금 말을 듣게끔 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북측에서는 안보 문제와 경제 협력 문제를 분리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북측에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주기 전에는 경제 협력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외교사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충돌될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 문제를 선행시킴으로써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능주의로서 옛날 고대부터 시작했던 외교 방식의 정석인데, 제가 보았을 때 우리가 손해볼지 모르고, 북한에서 우리의 제안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서 들어가면 장차 정치적인 문제도 안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외무부가 그렇게 했더라면, 문제 해결이 잘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자회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북측 대표라고 해도 바로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11월에 미국 선거가 있는데,

4자회담을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북측 태도를 본 후 우리의 태도를 정해야지, 그전에 어떤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끌려가는 형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밥 돌 의원에게 25%를 이기고 있다고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지금 제일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분란이 일어남으로 해서 클린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것을 북측이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38선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적어도 긴장의 고조를 암암리에 미국에 시사함으로써, 북측은 얻을 것이 더 많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측에서 쌀 3,000 톤을 빨리 원조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3,000 톤 외에도 물밑에서 미국에게 요구한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용되지 않고는 북측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4자회담에 응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린턴이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쥐고 4자회담을 시작했을 때, 그 성과가 안 나오면 클린턴은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볼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북한에서는 좀 더 끌어가면서 얻을 것을 다 얻은 다음에 회담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방법은 수정 제의를 해서 며칠 더 끈다든가 거부한다거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급하게 서둘면 서둘수록 우리가 발목을 붙잡힐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북측의 태도를 본 다음에 북측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취해야지, 그 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의 조급한 마음만 보이게 되고, 오히려 끌려가는 형식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북측이 4자회담을 하지 않겠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측의 국익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것이 북미회담이고 그 다음이 북일회담입니다. 내가 IPU로 평양에 갔을 때, 김영남이 “남한과 우리는 상대 안합니다. 미국과의 국교가 수립되면 일본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가 수립되어 있으면 우리의 경제 부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한국 대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북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김영남이 구소련과 중국과의 회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북경에 가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심중팔구 구소련과 중국이 북측에 4자회담을 당장 받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외무장관이 미리 알아서 전초전을 했어야 하는데, 뒷장구를 치니까 가서 만나지 못하고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4자회담이 성사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4자회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 없이 북한과 미국이 접근하게 될 경우, 남한은 고립되고 아무런 주동적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 4자 회담이 성사돼도 주변 4강의 신질서 구축 과정에서 남한의 발언권이 약화되어 통일 안되고 항구적인 분단 체제로 남을 가능성이 큼니다.

정재문 : 회담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목적이 중요한데, 지금 북측이 4자회담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것도 언젠가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날짜를 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인: 동북아에 신질서가 구축되어 버리면 주변 열강들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랄 것입니다. 동북아 신질서 구축 과정에서 주변 4강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남북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재정립되는냐 하는 것인데, 남북 관계에서 주동성은 남한이 갖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 없이 북한과 미일이 접근하게 될 경우, 남한은 고립되고 아무런 주동적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4자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주변 4강의 신질서 구축 과정에서 남한의 발언권이 약화되어 통일이 안되고 항구적인 분단 체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지금 북미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연착륙’ 시키면서 미국의 지도 아래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국제 관행을 학습시켜 주고 끌어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이 자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북한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 관련하여 중국의 잠재력을 말씀드리다면, 얼마전에 세계은행에서 2020년의 세계 7대 강대국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 4위가 인도, 5위가 독일, 6위가 한국, 7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아시아시대라고 하여 체제와 이념의 대립 구조에서 경제 이익 중심으로 바뀌는데, 4자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 내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과 관련지어 국제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한 논의를 좀더 진전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이동복: 4자회담은 작년에 고려했다가 회수된 것인데, 이번에 다시 제의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제네바 프로세스가 최소한 11월 선거때까지 잘 진행되어야만 클린턴 대통령의 이것을 외교적 업적으로 삼을 수 있는데, 북한이 평화 협정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쳐왔기 때문입니다. 군사정전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비무장지대(DMZ)를 무력화시키고, 4월 6일부터 장난도 한 것은 제네바 프로세스의 궤도를 이탈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평화 협정 문제를 가지고 들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국제 문제화되지 않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즉, 4자회담같은 것이 없어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회담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의 국익이 손상되지 않게끔 국제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오는 것을 막아줄 카운터 웨이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4자회담을 제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자회담으로 국제 여론을 동원해서 북한에 역공세를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평화 협정으로 장난칠 수 있는 명분을 박탈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4자회담은 그런 목적이 있는 제안이고 또 그런 목적의 상당 부분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것이 미국의 계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계산은 반드시 그렇지만 않은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플러스 알파 때문에 제주도 회담 후에 미국과 우리 대통령의 설명에 뉘앙스의 차이가 있었고, 이것을 좀 더 절대화시키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여 이 문제의 앞날을 생각해 보아야만(4자회담이 성사되면 좋지만) 성사되지 못했을 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南北 關係 改善 方案과 戰略

사회: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순승: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국제 문제화가 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제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리를 저버리고 주변 국가들이 우리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문제가 4자회담 같은 것이 없어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2보다는 2+4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국제적인 회담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 국익이 손상되지 않게끔 국제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4든 2+2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되어야지 북측이 원하는 2+2가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측에서 이번에 우리가 제의한 4자회담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수정 제의나 기타 안을 가지고 국제화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예지를 모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정재문: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인 휴전협정을 계속 지킨다는 문제는 戰後세대에게는 입장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치는 것은 북미 당사자간의 문제요 국제적인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갖는 가장 치명적인 우려는 '흡수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북측은 절대 변화할 리가 없습니다. 북한의 체제 위기로 흡수통일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한 북측의 우려를 어떻게 견어내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문제라고 보고, 1992년 2월에 제출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협정 자체도 4자회담이 잘되면 2+2나 2+4로서 보장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체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인내·양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양보의 기준은 김정일 정권이나 김정일 후의 정권에 대한 양보가 아니고, 북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양보할 만큼 양보해야 됩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앞으로 2~3년 내에 남북한 문제가 현재 분단 상태로 유지되더라도, 군사적인 대립이 완화되고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국민, 국회,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 체제는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우리의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남북 문제 내지 통일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여 국내 정치와 연계시킬 때, 민족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접근 방법에 있어서, 정경 연계 원칙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양시각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수인: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 문제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은 초강경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흡수통일'이란 것이 언론, 학자, 당국자의 입에서 많이 나왔는데,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갖는 가장 치명적인 의구심은 '흡수통일'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북측에서 절대로 변화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북측의 체제 위기가 엄존하고 있고 흡수통일될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흡수 통일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용어조차 우리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깊이 감추어 두고, 북측의 우려를 어떻게 견어내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정경 분리 문제도 큰 시야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본과 기술이 영향을 미쳐야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 체제 장벽을 없애는 마당에 자본이 진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업의 북한 투자 규모가 몇건의 예외는 있지만 500만 달러인데 이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자본이 들어가면 자기들 생활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힘차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 규제 장치를 뚫고 자본이 들어가서 교섭하는

통일 분위기 조성은 政經分離原則 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경제적으로 북측과 협력함으로써 정치적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측은 쌀과 경제적 문제로 나진·선봉에 우리가 들어올 것을 희망하고 있고, 남포항도 개방하고 있으므로, 이때 아무 제한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에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북측에 주고 받고 하면, 친화력이 생기게 되고 훨씬 경계심이 적어지고 신뢰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예에서, 베를린 장벽을 뚫은 원천은 구동독의 지도부가 통일이 되더라도 아주 극좌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통일 독일에서도 살아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적 신념으로 바뀌었던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자본의 진출과 생존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규제 장치를 점진적이고 획기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없으면 안됩니다. 북미 접근을 하면 미국이 엄청난 진출을 하게 될 것이고 일본도 한반도 통일에 잠재적인 반대 세력입니다. 일본이 남북한 등거리 외교로 두 개의 카드를 항상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북한에 엄청난 진출을 하게 되면 남북한 통일의 앞날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내부의 주체적인 힘을 가지고 적어도 GNP 규모에서 10대 1의 능력과 토대가 있기 때문에, 주동적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4자 회담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은 남북 대화를 힘차게 추진하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경직성은 전부 인정하지만 끝까지 앉아서 기다린다는 자세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해 남한의 주동성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정권은 5.6공보다 더한 대북 초강경 노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순승: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政經分離原則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북측과 협력함으로써 정치적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측은 쌀과 경제적 문제로 북측이 희망해서 나진·선봉에 들어오라고 하고 남포항도 개방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아무런 제한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좋겠습니다.

사회: 4자 회담의 목적은 미국과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서두른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데, 낙관적인 가치관을 가졌을 때는 새로운 힘이 솟고 국민의 컨센서스를 얻어서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경험이 많으신 이동복 의원이 우리의 대응 전략을 거시적 또는 미시적 입장에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4자회담과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북한과의 회담에서 달성코자 하는 것이 합의 도출이나 아니면 도출된 합의 이행이나 입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로 해결된 것이므로, 이행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4자회담도 이 기본합의서와 함수 관계 속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이동복: 4자회담은 형태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4자회담은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이기 때문에, 4자회담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우리 국가와 정부 입장에 엄청난 훼손을 가져올 요인이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 전쟁의 당사자가 물론 남북한이고 그 다음은 미국이 아니라 유엔 참전 16 개국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변질·훼손시킬 발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한 클라크 장군이 미군 사령관이기도 했지만, 미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참전 16 개국 플러스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유엔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조약 조인 당사국으로서 미국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4자회담을 설명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동을 엄청나게 묶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4자회담을 절대화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4자회담에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합의의 도출이나 아니면 도출된 합의의 이행이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얘기하는데, 평화 체제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로 해결된 것이므로, 그 이행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일종의 묘한 국민성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의할 때까지는 편달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것을 이행하는 문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하는 쪽으로 편달이 가해져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제쳐놓고 또 새로 대화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자회담도 1992년에 우리가 합의한 기본합의서와 함수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자회담이든 기본합의서의 이행이든 그 목표는 우선 북한의 '연착륙'입니다. 그런데 연착륙의 의미가 김정일 체제를 안정시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 체제를 다른 체제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 체제의 정책이 바뀌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연착륙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政經分離原則이 나오는데, 정경 분리가 안되는 원인이 우리와 북한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원인은 북한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존발트팀이나 타임 라이프팀이 한번 북한에 가보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 개방이 안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진·선봉에 인프라스

남북 경제 협력의 기본 형태인 임가공 무역에 있어서, 두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임체계가 없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생산 설비가동률이 28%인데도 유향 노동력의 잉여 노동력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럭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북한의 신용으로는 밖에서 들어가는 투자에 대한 회수 보장을 해줄 수 없으니까 실질적인 보증을 남쪽이 해주어야만 외국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시장을 일본이 선점하는 분야가 많다는 얘기와 관련하여, 나카이라 대사의 얘기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 몇번 당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서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양의 보통강여관이나 평양여관에 일본 사람들이 투숙해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간의 장차 국교가 정상화되었을 경우, 공공 자금의 집행 참여시 북한의 카운터파트를 미리 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투자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공 자금이 북한에 들어갈 때, 그것은 'Buy Japan'(즉, 일본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단서)이 적용되는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남한이 프라임(prime)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프라임으로 들어가고 한국이 서브(sub)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한국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일본이 북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남한을 추월한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남북 경제 협력의 기본 형태에 임가공무역이 있는데, 임가공이란 북한의 노동력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노임 체계가 없다는 것인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받는 임금을 노임으로 보면 안되고, 식량 등의 무료 배급을 임금에 가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것만을 노임으로 계산하니까 60 달러인데, 이것을 받는 노동자는 별로 생산성이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서 임가공할 때, 100~200 달러를 준다고 하면, 북한 노임과의 차액 부분이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당국에서 노동자들에게 주면 파급 불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떼고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가공을 해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한두 번 돌아갈 때는 납기도 지켜지고 양질의 제품이 나오는데, 두세 번 돌아가고 나서는 납기도 지켜지지 않고 품질도 떨어집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똑 같으니까 노동 생산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북한에 잉여 노동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유향 노동력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생산 설비가동률이 28%이므로 나머지 72%는 유향 노동력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설비에 관련되지 않는 노동력이 많습디만, 이것이 잉여 노동력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잉여 노동력화가 되

북한이 남한과 접촉하지 않는 이유는 남한과의 접촉에서 얻는 것보다는 일본과의 접촉에서 얻는 것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일간 국교 정상화는 미국과의 국교 수립 전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3중 경제인데 거의 공공 경제는 포기하고, 정권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화성 경비 조달에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 경제 계획이 잘못된 것을 정치적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북한의 현상은 그동안 여러 해가 걸렸던 기관의 건설, 남포댐의 건설, 그리고 평양 락원거리의 아파트 건설을 전부 군인이 했거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희 노동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정치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임가공을 통한 남북간의 의미있는 경제 협력을 하려면 대규모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내부적으로 일어나 정경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조순승: 제가 IPU로 평양에 갔을 때, 금강산에 올라가면서 북측 대표에게 “왜 미국·일본과 접촉하면서 남한과는 접촉을 안하느냐. 남한하고 접촉 해야 돈이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사람은 “조박사, 답답합니다. 일본하고 접촉을 하면 얼마 만큼의 경제 원조를 받지만, 우리의 것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절대 미국과의 국교 수립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을 잡고 늘어드는 것입니다. 미국과 국교가 수립되면 일본과도 될 것이고 그들이 돈을 가져오면 일단 자본 투자의 제1단계는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복: 북한 경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 경제는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는 3중 경제입니다. 제1은 국가 경제인 인민 경제, 제2경제인 군사 경제. 그리고 제3경제인 지하성 경제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인 인민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파산되어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1989년부터 북한이 발표하는 연평균 4.5%의 성장의 예산입니다. 이 ‘연간 4.5%’는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 증가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 + 국민 생산 증가분 + 투자분인데,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4.5% 증가의 예산을 매년 내놓고 있습니다. 5월이 되었는데도 예산이 발표되지 않고 있고,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 경제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제2경제라는 군사경제는, 모든 공산권이 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경제 단위입니다. 거기에는 군수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 산업도 있고 전자 산업도 있습니다. 군은 무기를 수출해서 받는 대금을 국

남북 관계의 개선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계속성 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번 4자회담의 조건도 공정하게 마련해서 우리 국민도 공감하고, 북한도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로 회입하지 않기 때문에 지탱이 됩니다. 한 때는 무기를 15억 달러까지 수출했는데 지금은 몇천만 달러밖에 수출을 못하니까 지탱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나머지가 제3경제라고 해서 그것을 '내탕금 경제'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코트 이코노미(Court Economy)라고 합니다. 노동당이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밀수, 아편 재배, 삼각 무역 등 지하경제성 경제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 이복에 왕래하는 것이 전부 이 경제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로 환입되는 경제 행위가 아니라 현금성 경제 활동입니다. 그것 가지고 북한의 정권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경화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고, 일본의 학교를 팔아서 가지고 들어가려는 바로 그 돈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북한 경제의 실상에 대한 하나의 조감도가 나옵니다. 북한은 거의 공공성 경제를 포기하고 있고, 정권 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경화성 경비를 만드는 데만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경 분리는 결국 이러한 체제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서, 다시 공공 정책 부문이 지하성 경제를 다시 안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정경 분리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모든 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계속성 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번의 4자회담의 조건도 공정하게 마련해 내놓음으로써 우리 국민도 공감하고 북한도 그것을 받아들일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오늘 토론은 4자회담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그 어디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새롭고도 매우 심도있는 토론이었습니다. 15대 국회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국회, 통일을 준비하는 국회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공유하여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통일 정책 대안이 15대 국회에서는 더 활발히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